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인쇄일 2006년 5월

발행일 2006년 5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2521, 팩스: 02)901-2541

인쇄처 두일디자인 전화: 02)2285-093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1	I.	서론
	II.	지역협력의 이론과 실제
2		1. 지역협력의 이론
4		2. 지역협력의 실제적 발전
	III.	아시아 지역협력의 실제적 발전
8		1. 아태경제협력체
10		2. 아세안지역안보포럼
11		3. 아세안+3 정상회의
14	IV.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방향
17	V.	한국의 정책방향

I. 서론

2차대전 이후 세계각국은 인접국가들과 보다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양자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여러 국가간 관계를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고자 하는 여러 선구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다. 그 결과 아직도 국제관계는 양자관계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관리되고 있지만, 유엔을 비롯한 범세계적 국제기구 및 다자간 기구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지역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유럽의 통합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역협력을 모색하는 시도는 지속되어 왔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의 각국이 일찍이 다자간 협력을 시도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지난 십수년간을 회고해 볼 때 국제적으로 지역국가간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 1995년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지역적 무역 및 경제 관련 협정에 가입해 있다. 물론 세계 각국이 속해 있는 협정의 폭과 수준이 제각각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발전을 필두로 해서 세계적으로 지역적 협력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을 통합하고자 하는 논의는 2차대전 이전에도 있었지만, 유럽의 각국을 경제 및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이후라고 하겠다. 사실상 2차대전 종전과 함께 유럽의 각국은 개개 국가의 힘으로써는 더 이상 세계무대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였다. 즉, 미국이 세계적으로 정치 및 경제면에서 우월성을 보임에 따라 유럽의 재건 과정에서 역내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유럽을 통합하는 데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워너 위덴필드(Werner Weidenfeld)는 유럽통합의 동인으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욕구, 안전보장에 대한 기대, 자유와 이동성에 대한 기대, 경제번영에 대한 희망, 새로운 힘에 대한 기대 등 다섯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¹ 그러나 유럽통합

¹ Spiering, M., "National Identity and European Unity," Wintle, M. (ed.), *Culture and Identity in Europe: Perceptions of divergence and unity in past and present* (Aldershot: Avebury, 1996), p. 98.

이 그 과정에서 역내국가들에게 긍정적 이익을 항상 보장한 것이 아니었으며, 통합에 따른 비용도 동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의 주권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큰 이슈가 된 것이 사실이며, 통합이 진전되는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타협양식을 고안해 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지역통합 경험은 후발국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러시아연방이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이 개혁과 개방의 성공적 실천으로 비약적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한편, 북한도 제한적이지만 경제적으로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각국도 냉전시대의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동남아 국가연합에 인도차이나 반도의 제국들이 가입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각국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외부문, 특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역내 및 역외국가와의 상호의존성 증대는 국가간 협력을 심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국제무대에서의 국가간 경쟁을 유발하고 무역마찰 등 국가간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도 안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상호의존성 증대에 따른 국가간 경제협력 문제를 주로 양자간 협의채널을 통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호의존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냉전 이후 시대의 경제적 문제조정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도 아시아 각국은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역협력의 이론과 실재를 분석하여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지역협력의 이론과 유럽, 북미, 아시아에서 진행된 지역협력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아시아지역에 현존하는 다자간 협력체를 파악해서 특징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자간 협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역협력의 이론과 실제

1. 지역협력의 이론

지역협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설명하고자 하는 초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이론가들은 국제관계의 미시적 수준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존하는 국제체제의 틀 안에서 펼쳐지는 지역협력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지역국가들이 자국의 주권이나 국가적 경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협력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²

두 번째 그룹의 지역협력 관련 이론은 지역협력의 증대가 기존의 국가간 관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지역협력의 조화로운 추진에 대해서 해석하는 동시에 지역협력의 증진에 대한 처방을 제시한다. 사실상 이들은 이론가이면서 행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바, 유럽연합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양대 세계대전 사이의 이론가들은 평화로운 유럽대륙의 실현을 위한 당위적인 이론에 치중함으로써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전후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발전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트라니(David Mitrany)에 의한 기능주의는 협력이 일정 분야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분야에도 확산되어서 점차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이 성사된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³ 즉, 어떤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가가 가장 효율적인 주체가 아니라 지역기구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내국가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분야별 기능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보다 나은 협력안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편, 기능주의에서는 지역협력이 자동적으로 증진될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반해서, 신기능주의는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정치 및 사회 엘리트 계층이 협력사안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제를 편다.⁴ 사실상 신기능주의는 유럽에서의 통합과정을 선도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으며,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역할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² 이들 이론은 적응이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국제관계에서의 지역협력 양상을 조정, 협력, 조화, 조합, 동시행동과정, 초국가주의 등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A.J.R. Groom and Paul Taylor (eds.), *Framework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London: Pinter Publishers, 1990), pp. 27~122.

³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London: Roy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1943); *The Functional Theory of Politics*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75).

⁴ E.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세 번째 그룹의 학자들은 국제체제적 차원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협력을 분석하고 있다. 즉, 국제체제의 변화가 지역협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지역협력의 증대가 국제체제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양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지역협력이 세계적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밝히고자 하고 있으며, 세계적 차원의 국제질서 변화가 지역협력의 발전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협력과 관련한 이론들은 국제관계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지역통합을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표 II -1> 지역주의 이론의 특성⁵

	적응이론	통합이론	국제체제이론
분석의 단위	기존국제관계	국제체제 변화	국제체제 초월
주요명제	조정, 협력, 조화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체제이론
주요행위자	국가, 정치지도자, 사회적 그룹	국가, 정치지도자, 대중, 국제기구	국가, 국제기구
이론의 초점	설명	분석, 처방	처방

2. 지역협력의 실제적 발전

가. 유럽의 지역협력

유럽에서 지역협력을 증진하고 정치적으로도 통합하고자 하는 제안은 16세기 이후 주기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으로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⁶ 그러나 유럽통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이후라 할 수 있다. 즉, 유럽의 각국은 양대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서유럽의 재건과정에서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고자 보다 실제적인 조치들에 합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초기에 각국이

⁵ 하기 책의 내용을 요약 및 재정리함: A.J.R. Groom and Paul Taylor (eds.), *Framework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London: Pinter Publishers, 1990).

⁶ Boxhoorn, B., "European Identity and the Process of European Unification: Compatible Nations?" Wintle, M. (ed.), *Culture and Identity in Europe: Perceptions of divergence and unity in past and present* (Aldershot: Avebury, 1996), p. 136.

상정하였던 협력의 폭과 수준은 다양각색이었지만, 통합을 향한 노력이 꾸준히 진전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서독 등 6개국이 역사상 최초의 초국가적 기구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1951년에 결성함으로써 유럽공동체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사실상 이 기구의 결성을 결정하게 된 요인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즉, 프랑스와 독일간의 오래된 반목 및 적대관계를 항구적인 평화관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후 1958년에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가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프랑스와 독일간에 미국의 유럽에서의 역할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통합을 향한 발전이 더디게 진전되었다. 그 결과 1967년에 유럽공동체가 발족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까지는 통합진전에 큰 성과가 없었다. 이후 1990년대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향한 일련의 협상과정을 거쳐 단일통화인 유로를 통용시키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동유럽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유럽대륙에서의 지역협력은 경제면뿐 아니라 정치면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회원국도 증가일로에 있다.

유럽에서의 지역협력은 현재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은 유럽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유럽대륙의 번영과 안보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구로 자리잡게 되었다.⁷ 한편, 유럽연합이 선진국간 지역협력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유럽연합의 동유럽으로의 확대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을 편입시킴에 따라 발생할 잠재적 문제점이 어떻게 순조롭게 처리될 것인지는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나.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5개국의 지도자들이 1967년에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결성하였을 때, 이들은 평화, 안정, 번영을 향한 지역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⁸ 즉, 당시의 동남아 상황을 회고해 볼 때, 이 지역은 안보면에서도 불안정하였고 경제면에서도 후진국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⁷ "The EU's Aims and Prospects," <<http://europa.eu.int/abe-en.html>>.

⁸ "History and Evolution of ASEAN," <http://www.aseansec.org/history/asn_his2.html>.

아세안은 설립 이후 초기 10여 년간에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대립상황하에서, 아세안의 중립성을 둘러싼 회원국간 이견과 각각의 국내상황으로 인해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1975년의 베트남전쟁 종식도 동남아국가연합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의 캄보디아를 둘러싼 지역분쟁은 동남아지역의 역내협력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설립 이후 수십년간의 더딘 발전을 극복하고 아세안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된 것은 1995년에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동남아국가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으며, 아세안 회원국간 정상회담은 지역협력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의 발전성과는 동 기구가 개발도상국간 지역협력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내 및 역외 전문가의 관심대상이었다. 또한 동남아지역의 특성상 냉전시대에는 인도차이나반도 3국과 기존 아세안 회원국이 대립된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남아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협력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질서하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비된 아세안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이 2003년에 채택한 협력선언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즉, 회원국 정상들은 안보공동체(ASC: ASEAN Security Community),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사회문화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등 3개 공동체를 2020년까지 건설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아세안의 발전과정을 회고해 보면, 동남아지역의 지역협력 발전에는 국제관계의 안보 및 정치불안이 해소되는 것이 선결조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세안의 향후 발전상황은 지속적으로 주목할 사안이라 하겠다.

다. 북미의 지역협력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은 1994년에 발효되어 북미대륙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무역 및 경제관계를 대폭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1989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인접국가인 멕시코를 추가시키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정은 당시에는 상당히 복잡한 것이었다. 특히 멕시코는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으며, 경제

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북미의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⁹ 미국의 입장에서는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제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돌파구라는 대표적 이해관계가 합치되어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던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은 협정 자체에 나와 있다시피, 무역장벽 제거, 북미대륙의 시장 확대, 투명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제도 확립 등이다.¹⁰ 또한 북미대륙에서의 3국간 지역협력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이지만, 노동 및 환경분야까지 포함한 협력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지역협력의 수준을 가일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성사와 발전은 초강대국을 포함한 지역협력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방향을 가늠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유럽, 북미, 동남아에서의 지역협력은 출발점에서부터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나타난 협력의 수준과 폭도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유럽연합의 태동은 경제재건과 전쟁방지라는 요인이 주요 동기로 작용했으며, 아세안은 이데올로기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역내평화와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역내국가들의 희망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전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추세에 북미대륙이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협상의 타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정치적 통합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남아국가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간 정치적 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역협력을 증진시키는 과정면에서 보면,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성사과정이 실질적이고 자세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협력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이었다면, 아세안의 발전과정은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역협력의 추구라는 큰 비전을 달성하고자 출발하는 위로부터의 추진방식이었던 것이다.

⁹ Earl H. Fry, "A Continent of Free Trade: Negotiations toward 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State Government*, Vol. 64, No. 4 (1991), p. 123.

¹⁰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http://www.sice.oas.org/trade/nafta/chap-01.Stm#A102>>.

하지만 이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역문제를 각국이 협력해서 해결하자는 자세와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희구하는 지도자 및 시민들의 태도이다. 이러한 지역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일로에 있으며, 본 논문의 주 관심사인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점차적으로 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Ⅲ. 아시아 지역협력의 실제적 발전

지역협력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지리적 정의를 보면, 아시아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나뉘어진다. 동남아시아는 상기한 아세안 10개국 포함되어 있으며, 동북아시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러시아의 극동지역 등이 있다. 동남아시아에는 아세안이 지역기구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동북아시아에는 동 지역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 지역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남아 및 동북아 국가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아세안+3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등 지역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태경제협력체

아태경제협력체는 1989년 호주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간 각료회의의 형태로 출범되었으며, 1993년부터는 매년 회원국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실상 아태지역에 지역협력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일본 역할에 대한 의구심과 역내국가들의 경제발전 정도 및 문화·종교의 상이성 등 다양성으로 인해서 지역기구로서의 발족이 늦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의 냉전체제 이완 및 지역주의의 부상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아태지역에도 지역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역내국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또한 강대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도 자국을 제외한 지역협력기구가 아태지역에 설립될 경우 수반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인식하여 아태경제협력체의 출범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태경제협력체는 느슨한 포럼 형태의 협력기구로서 원활한 정책대화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93년에 설립된 사무국은 각종 회의개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무국의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 20명 정도의 회원국 파견 직원들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의장국이 담당하고 있다.¹¹

아태경제협력체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배타적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지역기구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역내국가간에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전 세계적 무역 자유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태경제협력체는 회원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원칙하에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상 회의도 공식회의의 형태보다는 비공식적 형태의 자연스러운 분위기하에서의 만남을 원칙으로 하는 회원국들간 대화 및 협의를 성사시키고 있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례화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세계무역기구 출범 당시의 아태경제협력체 정상들의 무역자유화 촉진 의견과 9·11 테러 이후의 정상들간 회동에서의 반테러 성명 등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의 진전,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의 확보, 미래를 향한 APEC의 진전 등이었다. 즉,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와 관련해서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의 활동과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의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WTO DDA에 관한 특별성명'을 채택하였다. 또한, 보고르선언의 목표인 2010년과 2020년의 역내무역 투자자유화 시한까지의 역점추진사항인 부산로드맵을 채택하였다. 한편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의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각국 정상들은 테러방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대응 및 보건안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¹²

¹¹ 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은 설립당시 회원국 12개국(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등 21개국이다.

¹² 세계무역기구의 활동과 관련, APEC 정상들은 도하라운드가 높은 수준의 협상목표를 유지하면서 2006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으며,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상당한 관세인하와 수량제한 감축에 의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 2010년까지 모든 유

아태경제협력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회원국들의 경제 자유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반테러 및 보건, 환경, 부패 등 비경제 이슈들로 의제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태경제협력체는 출범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회원국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한계점도 노정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태경제협력체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진실한 의미의 지역기구가 아니라 구속력이 결여된 논의의 장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태경제협력체는 아시아지역과 미주대륙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정기회의가 누적됨에 따라서 회원국간 이해가 증진되고 협력의 폭과 수준도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태경제협력체가 유럽연합과 같이 경제통합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며, 경제통합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정체성을 지향점으로 할 것인가는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1992년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역외국가들간의 정치 및 안보대화를 증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아세안의 확대 외무장관회의(PMC: Post Ministerial Conference)의 틀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 및 안보 관련 협력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1994년 태국에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¹³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아·태지역의 주요한 정치 및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평화유지, 수색 및 구조, 재난구조, 대테러, 초국가적 범죄, 해양안보 등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역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 기구는 상설 사무국은 없으나, 매년 외무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회의 성격을

행의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를 보장하는 농업분야에서의 포괄적 합의를 이루었다. 부산로드맵은 다자무역체제 지원, 공동 및 개별실행계획 강화, 높은 수준의 지역 및 자유무역협정, 부산기업아젠다, 전략적 능력배양 추구, 선구자 접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규륜,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참조.

¹³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원국은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 10개국(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아세안 대화상대국 10개국(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의장국, 중국, 러시아, 인도), 몽골, 파푸아뉴기니, 북한 등 23개국이다.

가지는 신뢰구축 회기간 회의를 통해서 고위인사 교류 및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¹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아·태지역의 다양한 안보문제에 관한 역내국가들간 다자간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내 현안문제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역내국가간에 사전에 토의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통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아·태지역내에서 지역안보문제에 관한 토론기구로서 정착되었으며,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국가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동 기구는 비록 초보적이지만 신뢰구축조치를 통해서 역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지역안보의 현안을 실제로 해결하는 실천력이 부족하며, 핵심사안에 대한 논의는 회피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 등 논의만 하는 기구로서의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¹⁵

3. 아세안+3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는 1997년 개최된 아세안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의 정상들이 초청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아세안+3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어 동아시아 지역국가들간 정상들의 만남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세안 정상들과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아세안+1 회의도 개최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3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간 3국 정상회의도 함께 개최되고 있다. 즉, 동아시아 국가 정상들의 만남은 정례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정상회의는 지역협력 심화를 위한 개념 및 방향 설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역내국가들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민간차원의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과 정부차원의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의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동 그룹의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개념적, 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특

¹⁴ <http://www.mofat.go.kr/ko/division/dip_1_view.mof?ipage+1&b_code+dip_9&seq_no+205&p>.

¹⁵ 이서항, “ARF 평가와 발전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2002-27)』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2).

히 동아시아 비전그룹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역내국가들이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역내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측면에서 무역, 투자, 금융분야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인적 자원 개발과 인간안보를 증진시키며, 문화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전그룹 보고서는 경제통상분야 협력을 위해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시대 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금융분야 협력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지역금융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¹⁶

2003년에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 이후 열린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공동선언을 도출해 내었는데, 그 내용은 한·중·일이 동아시아 협력강화, 지역 및 세계평화와 번영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¹⁷ 이러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도출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지역국가들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2005년 12월에는 ASEAN+3 정상회의에 이어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가 개최됨으로써, 아시아의 지역협력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3개국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인접국가의 수반들이 최초로 회동하여, 쿠알라룸푸르 EAS 선언을 채택하였다.¹⁸ 동 선언은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참여국들간 폭 넓은 정치, 경제, 전략적 이슈 등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는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킬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정상회의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및 외향성을 지

¹⁶ 배궁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요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2001-36)』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1).

¹⁷ 한·중·일 정상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3국협력은 UN 헌장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 따라 추구한다. 상호신뢰, 존중, 호혜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한다. 3국간 경제계와 학계 및 NGO의 역할 수행을 권장한다. 3국간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일부로서 아세안의 통합과정을 지원한다. 3국협력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비배타적으로 추진한다. 실질적 협력의 진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17개 분야 협력의 확대 및 심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7개 분야는 무역 및 투자, IT 산업, 환경보호, 재난피해 방지 및 관리, 에너지 개발 및 이용, 역내금융 안정증진, 국제핵융합 실험로 등 과학기술, 관광인프라 개발, 어족자원의 활용 및 보존, 국민차원의 다양한 교류 접촉, UN의 역할 강화 및 개혁, EASG 권고조치 이행촉진, 안보대화 강조, 초국가적 범죄예방 등이다. 배궁찬,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제7차 ASEAN+3 정상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2003-40)』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¹⁸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하기 문건을 참조, 배궁찬,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의 (EAS) 결과 분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5).

향하는 포럼으로써 ASEAN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정상회의는 ASEAN+3 정상회의의 발전을 도모하려던 당초의 의도와 달리, 호주와 뉴질랜드 및 인도가 참여하는 등 회원국이 확대됨으로써 아시아국가들만의 협력의 심화를 원하는 참여국들의 기대를 희석시킨 결과를 빚어냈다. 즉,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미국이 배제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가 ASEAN+3 형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회원국 확대에 따라 지역기구로서의 제도화 문제 등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시키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은 지역협력기구들과 함께 동북아지역에는 두만강지역개발기구(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및 동북아안보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NEACD)가 기능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의 지방정부들은 다양한 경제권을 상정한 소지역 차원의 경제협력 심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에 따라 태평양 경제공동체 건립 구상을 시작으로 하여 대중화공동시장 형성에 대한 구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중국의 남부연안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남경제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¹⁹ 한편 중국은 일본에서 환동해 경제권을 주제로 한 논의가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황해 경제권 구상을 제기하였다.

일본은 니이가타 지방을 중심으로 일본의 서부지역과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의 동해에 면한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한 환동해 경제권 구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측 구상의 특징은 동북아 경제권 구상에 있어서 광범위한 국가를 단위로 하기보다는 환동해경제권과 같이 연해지역간의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²⁰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등 극동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도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참여하는 등 동북아지역에서 진행

¹⁹ 오용석,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중국의 구상과 전략,”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pp. 160~198, 참조.

²⁰ 강홍구,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의 시각과 전망,”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pp. 237~256, 참조.

되고 있는 소지역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아시아지역에는 유럽의 경우와 같이 발달된 지역협력기구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지역국가들이 광역적 차원의 다자간 협력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지역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래 표는 이러한 기구들의 활동을 특징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사실상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협력기구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Ⅲ-1> 동북아시아 지역협력기구의 특징

	제도화 수준	지리적 범위	주요 협력수단
ASEAN	강함	동남아시아	조정
ASEAN+3	약함	동남아 및 동북아	포럼
ARF	약함	동아시아 및 역외국가	포럼
APEC	중간	아시아 및 태평양연안	포럼, 자발적 조정
NEACD	약함	동북아시아	Track II 포럼
TRADP	약함	동북아시아	개발프로젝트

IV.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방향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역내적 요인과 역외적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역내적 요인이란 지역국가들의 사정과 지역국가들간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동태적 요인과 역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태적 요인이 있다. 역외적 요인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의 발전에 관심있는 국가들의 입장이 일차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 사실상 이러한 요인들은 아시아 지역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촉진요인이면서 동시에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아시아의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정체성이다. 아시아의 정체성은 과거에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냉전이후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지역협력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정치적 요인으로는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안정된 안보환경에 대한

관심이라 하겠다. 즉, 아시아 국가들은 2차대전 이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간 대결, 영토분쟁,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둘러싼 갈등 등 다양한 안보불안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협력을 갈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탈냉전시대의 조류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으며, 개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협력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아직도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때, 지역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정권의 정통성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찾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동일한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국가들의 시민들은 높은 교육열과 저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화교들의 존재와 한자문화의 공유로 인해서 상호간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시아 지역협력을 촉진시키는 첫 번째 경제적 요인은 역내국가간 상호보완적 경제관계이다. 일본은 자본과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자본과 중진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중국은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및 경제적 역동성이 더해진다면 아시아는 21세기를 주도하는 경제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냉전이후 시대에 대폭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역내국가간 무역 및 투자는 지역적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간 지속되는 무역불균형의 문제와 증가하는 경제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및 불법이민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역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21세기의 국가간 경제관계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제주체간 상호작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리적 근접성은 지역협력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모든 국가가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협력을 추진하기에 알맞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은 주로 정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역내 국가 간에는 아직도 정치적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 특히 역내국가들이 표방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정치체제는 지역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 등 역내에 존재하는 분단국가들의 존재도 지역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 역내국가들이면서 동

시에 세계적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지역협력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즉, 중국과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협력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항상 의문인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역내에서 패권 경쟁을 추구한다면 지역협력은 커녕 역내의 불안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추구 등 과거사도 지역협력의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의 지역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역외요인의 첫 번째는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유일한 패권국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일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태지역의 다자간 기구인 아태경제협력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만의 배타적 지역기구의 설립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미국이 반대한다면 아시아 지역국가만의 지역기구를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역외요인은 아시아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미와 유럽 등 세계 각 지역에서 발전되고 있는 지역협력의 추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지역적으로 역내국가간 경제관계를 심화하는 메카니즘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지역경제협력구도의 발전이 전 세계적 경제자유화에 역행한다고 간주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역협력이 발전된다면 전 세계적 평화와 번영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협력의 양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유럽, 북미, 동남아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바, 이들의 제도적 발전상황을 보면 각기 다른 경로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협력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의지와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의 인식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협력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작은 이슈라도 역내국가들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분석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함께 앞에서 살펴본 현존하는 아시아의 지역기구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아시아지역에는 배타적인 기구 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지역협력을 발전시키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시아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 때문이다. 한편 아시아에 배타적 지역협력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역협력이 발전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역설적으로 아시아만의 공식 지역협력기구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대화채널을 통해서 보다 유연한 지역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즉, 아시아 지역협력은 역내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와 역동성을 활용하면 아시아에 적합한 신 개념의 지역협력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역동성은 여타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협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역내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에의 자발적 참여방식은 비록 발전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보다 큰 추진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방향을 제도 및 기구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은 사안별로 여러 수준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유연성과 비대한 기구를 설정하는 오류를 탈피하기 위한 상설기구의 관료주의화 배제 등 원칙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아시아에는 상이한 경제발전 정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들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선결조건인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아시아의 지역협력은 자발성 고양, 역동성 활용, 신 개념 창출이라는 발전원칙과 제도적으로는 유연성 유지, 다양성 존중, 관료화 배제라는 운영원칙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아시아의 지역협력은 유럽 또는 북미형이 아닌 고유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앞선 형태의 지역적 문제해결 방식을 고안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한국의 정책방향

한국의 아시아지역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보면, 최근 중국과의 경제교류 증대로 인해서 균형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여 있는바, 역내 선진국인 일본에 대한 수출노력을 강화하여 무역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미국 경제의 세계적 중요성 및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여 기존 미국 시장확보율을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역내 개발도상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전시킴과 동시에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에 따른 효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근본적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므로 러시아와의 경제협

력도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근본적으로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이므로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화 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동북아지역이 역외국가에 대하여 배타적인 정책을 취하거나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보이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경제는 세계화하고 있어 국가간의 경계가 차츰 전통적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바, 한국도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북아지역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과 민간부문에 의한 자율적인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시아의 지역협력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광역적 지역협력과 사안별 지역협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아시아 지역협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아태경제협력체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바, 이들 기구들은 회원국의 숫자가 지역통합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광역차원의 기구들은 회원국간 결속력 및 구속력을 강조하기보다는 포럼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존하는 광역 지역기구들에서의 활동은 미래지향적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빈번하게 하는 한편,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해서 공통 관심사를 제고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구도는 역내에 존재하는 강대국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접근하는 저수준의 협력사업을 회원국들의 부분집합 개념에 의거해서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한국은 에너지 협력과 같은 특정사업은 해당 국가들과 실질적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광역 지역기구에서의 정상간 회동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한 지역통합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무역국가이므로 폐쇄적 지역주의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각국은 역외국가와 역내국가간 대우에 있어서 차별성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은 아시아의 지역협력 구도를 설정함에 있어 보다 장기적 차원의 사고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아시아의 지역협력 증대가 공식적 지역통합 노력이 부재한 가운데서도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는 것이

지역통합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아시아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안보협력 신뢰기반 증대를 한국의 아시아 지역협력 추구의 한 가지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냉전이후시대의 중요한 명제 중 하나가 경제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때, 한국은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을 활용하여 지역협력 구도를 설정하되, 경제협력의 증대가 역내 안전보장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중국의 개방 및 개혁과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은 한국의 양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경제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한다면 남북한 경제관계도 가일층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의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심화하는 한편,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이 통일을 향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단절된 지역경제협력의 고리를 한민족이 합심하여 이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동북아 지역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지역협력은 냉전이후시대의 평화 및 번영 추구라는 세계적 조류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 구도를 전망하기 위해서 유럽, 북미, 동남아의 지역협력 추세를 분석하고, 현존하는 아시아 지역관련 다자간 협력기구들의 활동을 파악한바, 아시아에서는 이미 지역협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아시아의 지역협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것같이 느껴지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만의 공식적인 지역협력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의 역내협력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시아의 지역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구의 설립같은 형식보다는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협력방안의 창출과 실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고립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지역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게 간주된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문호가 개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Aggarwal, Vinod K. and Charles, E. Morrison. *Asia-Pacific Crossroads*. New York: St. Martin's, 1998.
- Appendini, Kirsten and Sven Bislev. *Economic Integration in NAFTA and EU*. New York: St. Martin's, 1999.
- De Melo, Jaime and Arvind Panagariya.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Denlanty, G.. *Inventing Europe: Idea, Identity, Reality*. Houndmills: Macmillan, 1995.
- Dutta, M.. *Economic Regionalization in the Asia-Pacific: Challenges to Economic Cooperation*. Northampton: Edward Elgar, 1999.
- Fawcett, Louise and Andrew Hurrell.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Geiger, Till and Dennis Kennedy. *Regional Trade Blocs, Multilateralism, and the GATT: Complementary Paths to Free Trade?* New York: Pinter, 1996.
- Groom, A. J. R. and P. Taylor. *Framework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London: Pinter Publishers, 1990.
- Mattli, Walter.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Mitrany, David. *The Functional Theory of Politics*.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75.
- Sperling, James. *Two Tiers or Two Speeds: The European Security Order and the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and NATO*.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 Wilson, K. and Dussen, J. Van der (eds.). *The History of the Idea of Europe*.

London: Routledge, 1995.

권을 외.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김규륜.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홍중, 손병해 공편저. 『동북아 경제통합』.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2. 논문

Atkinson, Glen. “Regional Integration in the Emerging Global Economy: The Case of NAFTA.” *Social Science Journal*, Vol. 35, no. 2, 1998.

Baylis, J.. “Europe Beyond the Cold War.” Baylis, J. Renegger, N.J. (eds.). *Dilemmas of World Politics*. Oxford: Clarendon Press, 1992.

Bhagwati, Jagdish.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Jaime de Melo and Arvind Panagariya (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Boxhoorn, B.. “European identity and the process of European unification: Compatible notions?” Wintle, M. (ed.). *Culture and Identity in Europe: Perceptions of Divergence and Unity in Past and Present*. Aldershot: Avebury, 1996.

Etzioni, A.. “The Epigenesis of Political Communiti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Rosenau, J. N.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Free Press, 1969.

Frey, Earl H.. “A Continent of Free Trade: Negotiations Toward 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State Government*, Vol. 64, no. 4, 1991.

Paraskevopoulos, Christos. “Ricardo Grinspun, and George Eaton.”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mericas*. Brookfield: Edward Elgar, 1996.

Sampson, Gary. “Regional Trading Arrang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ill Geiger and Dennis Kennedy (eds.). *Regional Trade Blocs*,

- Multilateralism and the GATT*. London: Pinter Publishers, 1996.
- Spiering, M.. “National Identity and European Unity.” Wintle, M. (ed.). *Culture and Identity in Europe: Perceptions of Divergence and Unity in Past and Present*. Aldershot: Avebury, 1996.
- Toma, P. A. and Gorman, R. F..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Understanding Global Issues*. Pacific Grove: Brooks/Cole, 1991.
- Tranholm-Mikkelsen, J.. “Neo-functionalism: Obstinate or Obsolete? A reappraisal in the Light of the New Dynamism of the EC.”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991.
- Weidenfeld, W.. “Basic Questions of European Integrations.” Nelson, B. Et al.. *The European Community in the 1990s: Economics, Politics, Defense*. New York: Berg, 1992.
- 강홍구. “동북아경제협력에 관한 일본의 시각과 전망.”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 배궁찬.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제7차 ASEAN+3 정상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2003-40)』.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 _____.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요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2001-36)』.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1.
- _____.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 분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5.
- _____. “제6차 ASEAN+3정상회의 결과 분석.” 『주요국제문제분석(2002-38)』.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2.
- 오용석.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중국의 구상과 전략.”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 이서향. “ARF 평가와 발전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2002-27)』.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2.

3. 기타자료

<http://europa.eu.int/comm/dg1a/enlarge/index.htm>

<http://www.eurunion.org/legislat/extrel/enlarge.htm>

<http://www.nyu.edu/globalbeat/emu.html>

<http://www.aseansec.org>

<http://www.mofat.go.kr>

통일연구원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상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